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공보담당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154 / 팩스 0502-193-1199

## 보 도 자 료

2025. 4. 3.(목)

### 제 목

### 「前 해양경찰청장 등의 부패범죄 사건」 수사결과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(부장검사 김태헌)는 금일(4. 3.) ①유착 업체와 ②당시 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'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'을 청탁하고,
  -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'핫라인'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, 직권을 남용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합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 준 대가로 4,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前 해경청장 A○○을 구속 기소하고,
  -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※ 승진 청탁 브로커 H○○는 '25. 1. 10. 구속 기소
- 검찰은 금품수수과 설계변경 지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前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직접수사하여,
  - 업체로부터 위 승진 뿐만 아니라,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, 그 대가로 14억 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수한 브로커(G○○, H○○)들을 새롭게 규명하고,
  - A○○의 해경청장 2단계 승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브로커들과 업체를 통한 승진 청탁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의 '뿌리'였고, 송치 범죄사실은 '빙산의 일각'이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- 본건은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간 유착뿐만 아니라,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→사업 수주→금품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이고,
  -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단이 불가피한 중대범죄입니다.
- 향후 검찰은 총체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피고인		공소사실의 요지	비고
수뢰자 (해경 공무원)	①AOO [구속] [57세, 前 해경청장 (‘20. 3.~’21. 12.)] ※’22. 12. 서울중앙 지법에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‘21. 6. 甲 회사(乙 회사의 본사격)가 납품하여 ‘동해’ 함정에 장착된 미국 丙 회사 엔진이 ‘서해’ 함정에도 동일하게 채택되도록, 경비과장 등에게 계획을 변경한 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함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</li> <li>· ‘20. 9.~’21. 12. DOO로부터 상품권·인테리어비 등 합계 <b>3,778만원</b> 상당 수수 [뇌물수수·부정처사후수뢰]</li> <li>· ‘19. 9. DOO 등으로부터 해경청장으로 승진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 [뇌물약속]</li> <li>· ‘20. 4.~’22. 5. DOO 등으로부터 차명폰·상품권·차량 등 합계 <b>1,012만원</b> 상당 수수 [뇌물수수·부정처사후수뢰]</li> <li>※ 수뢰액 합계 <b>4,790만원</b> 상당</li> <li>· ‘21. 12. 재직 중 직접 처리한 ‘서해함’ 설계가 유지되도록 담당자에게 연락 [공직자윤리법위반]</li> </ul>	송치
	②BOO (57세, 現 해경 총경)	· ‘21. 1.~’22. 9. DOO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상품권·차량(시에나) 등 합계 <b>2,490만원</b> 상당 수수 [뇌물수수]	송치
	③COO (56세, 現 해경 총경)	· DOO 등으로부터 포항시 발주 선박사업 알선 청탁을 받고 ‘20. 4.~’21. 3. 오피스텔 임차료·상품권 등 합계 <b>1,516만원</b> 및 <b>1천만원(임대차보증금)</b> 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 수수 [특가법위반(알선수재), 청탁금지법위반]	
공여자	④DOO [44세, 乙 회사 실사주] ⑤EOO [57세, 乙 회사 상무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 [뇌물공여, 청탁금지법위반]</li> <li>* 乙 회사는 甲 회사의 협력업체로 乙 회사 영업으로 엔진 납품시 甲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받는 구조임</li> </ul>	송치
	④DOO ⑤EOO ⑥FOO [62세, 乙 회사 전무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와 같이 승진의 이익 제공을 약속 [뇌물공여약속]</li> <li>· GOO에게 AOO의 해경청장 임명을 청탁하고, 그 대가로 향후 해경 사업 수주대금 중 3%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,</li> <li>- AOO의 해경청장 취임 직후인 ‘20. 7.경 동해함 사업을 수주하게 되자, ‘21. 9. 15.~’23. 6. 30. 乙 회사 자금 <b>합계 13억1,396만원</b>을 GOO 등이 관리하는 유령법인 丁 회사 계좌로 송금 [특경법위반(횡령)]</li> </ul>	검찰 인지
알선 수재자	⑦GOO [72세, 한의사, 前 해경청장 인사권자와 인척] ⑧HOO [구속] [67세, 건축업자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‘19. 8.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한 이어도호 주발전기 사업수주 청탁 명목으로 乙 회사로부터 <b>5,000만원</b> 수수 [변호사법위반]</li> <li>· ‘19. 9. ~ ‘23. 2. AOO의 해경청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乙 회사로부터 <b>합계 10억 2,816만원</b> 수수 [특가법위반(알선수재)]</li> <li>· ‘20. 6. ~ ‘21. 11. 해군 신형 고속정 엔진결함에 대한 해군 감사 무마 및 관련 해군 대령 좌천 등 청탁 명목으로 甲 회사로부터 <b>3억 4,496만원</b> 수수 [특가법위반(알선수재)]</li> </ul>	검찰 인지

## II

## 주요 경과

- '24. 5. 16. 사경(서울시경), 불구속 송치
- '24. 10.~ 검찰, 추가수사[계좌추적(7회), 압수·수색(2회), 관계인 조사(42회)]
- '24. 12. 19. 알선수재자 2명(⑦ GOO, ⑧ HOO) 구속영장 청구  
→ 12. 24. 법원, ⑦기각·⑧발부
- '25. 1. 10. 알선수재자(HOO) 구속 기소
- '25. 2. 24. 알선수재자(GOO) 구속영장 재청구\*  
→ 2. 27. 법원, 기각  
\* 해군 함정 엔진결함에 대한 감사 무마 명목으로 3.4억원 수수 추가 확인
- '25. 3. 12. 前 해경청장(AOO) 구속영장 청구  
→ 3. 17. 법원, 발부
- '25. 4. 3. 前 해경청장(AOO) 구속 기소 및 7명 불구속 기소  
\* 17만 원 상당 식사비 등을 수수한 해경 1명(경정)은 기소유예 처분

## III

## 수사 의의 및 참고사항

### ① 前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유착비리 엄단

- AOO는 해양경찰청장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였고, 이들의 노력으로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함
- 공여자 DOO 등은 AOO의 해경청장 임명 직후인 '20. 7.경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,

- '21.경에는 서해함 사업에도 참여, 총 매출 342억 원(동해함·서해함 등 총 5척의 엔진 수주)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

피고인	지위	역할	취득 이익
① AOO	해경청장	수주 특혜	2계급 승진(치안감→치안총감)
⑦ GOO·⑧ HOO	브로커	승진 조력	합계 10억 원대
④ DOO 등	장비업자	청탁 대가 지급	총 매출 342억 원대

○ 그 과정에서 AOO는 동해와 작전 환경이 다른 '서해함'의 신규 설계에 대한 최종 보고를 마치고 예산 편성 단계에 있었음에도,

- 공여자들의 엔진이 납품되고 있던 동해함 설계가 서해함에도 동일하게 도입되도록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하였음

※ 높은 파도, 유빙 등을 고려하여 함정 폭을 넓히고 대빙설계를 반영하는 대신 최대속력(28→24노트)을 낮춘 동해함과 달리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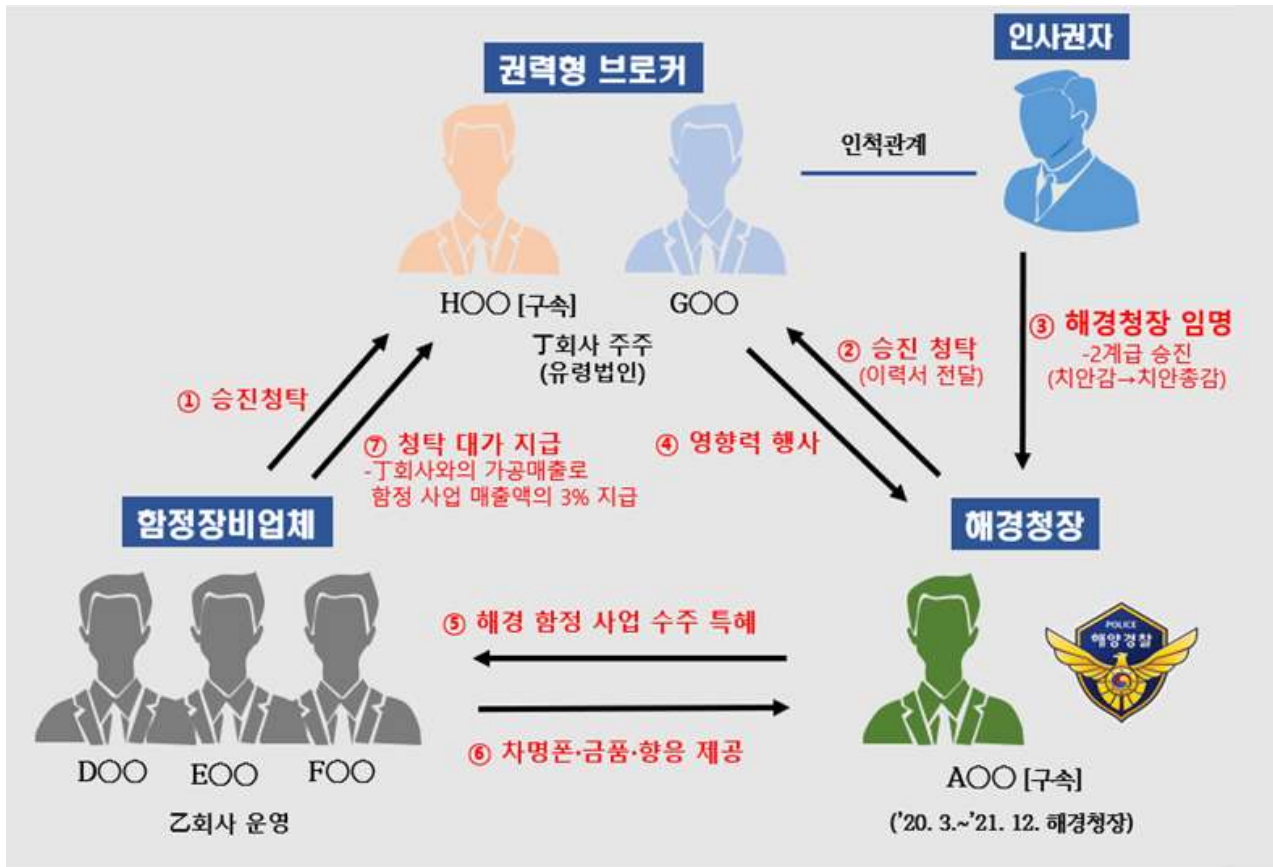
- 서해함은 대빙설계가 불필요하고 불법조업 단속, 중국 해경과의 충돌 등으로 작전해역으로 신속한 기동이 필수적이므로 설계시 최대속력이 중요
- AOO 퇴임 후에 해경은 결국 서해함 특성에 맞는 신규 설계를 실시하여 최대속력 28노트의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 도입을 결정하였음

○ 한편, 현직 총경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과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
## ② 前 대통령의 인척 등이 해양경찰청장 승진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범죄 규명

○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하여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(丁)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

- AOO가 DOO 등의 해경의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'해경청장 승진 약속'에 있었음을 확인함



○ GOO는 한의사로 前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,  
HOO는 건축 업자로 前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으로,

- DOO 등으로부터 해경청장 승진, 해군의 감사 무마, 해군 장교의 좌천, 사업수주 등 청탁\*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\*\*

\* 해경청장 승진 이외에, 나머지 청탁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(GOO 등 알선수재자들은 청탁을 전달한 사실 부인)

\*\* 검찰은 GOO에 대하여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, 기각되었음

○ AOO는 해경청장 승진에 대한 보답으로 DOO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주고,

- DOO 등은 각종 청탁의 대가로 GOO 등에게 관련 매출의 3% 상당의 이익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하는 등 공생적 부패사슬을 확인함

### ③ 해양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는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

-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'해경'의 함정 사업 뿐만 아니라 '해군'의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냄
- '해경'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속한 기동이 요구되는 서해함에 업체 청탁에 따라 기존 동해함 엔진을 도입하는 위험이 초래되었음
  - ※ 다만, 해경은 AOO 퇴임 후 서해함 특성에 맞는 신규 설계를 하였음
- 또한 '해군'에서는 甲 회사에서 납품한 엔진의 실린더 파손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해군·방위사업청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신형 고속정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자,
  - 이를 막고자 甲 회사 측은 GOO의 영향력을 확인한 뒤 GOO 등을 통해 감사 무마와 업체에 비우호적인 해군 장교의 좌천을 시도하였음
    - ※ 결국 미국 丙 회사 측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엔진을 전부 교체하였음

## IV 향후 계획

- 검찰은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☑